

POLITICS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광주-전남-전북, '상생·경제 동맹' 방안 모색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도, 13개 시군 외국인 유치

전남도는 법무부가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선정돼 13개 인구 감소지역에 지역우수인재(F2R) 386명과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308명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도지사 추천을 통해 지역특화비자(E74R·F2R·F4R)를 발급해 인구 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전남에선 담양·곡성·구례·고흥·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영광·장성·진도·신안군이 사업에 참여한다. 전년보다 7곳 늘어난 것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우수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은 국내에서 E-9, E-10, H-2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평균 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 등을 점수제로 평가해 전환을 허용한다. 한국어 능력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취득이 원칙이다. 현재 취득하지 못한 경우 2년 내 취득을 조건으로 비자 전환이 가능하다.

지역우수인재(F2R) 유형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이나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이 5년 이상 모집 지역에 거주하며,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지역특화동포(F4R) 유형은 모집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비인구감소지역이나 해외에서 포집 등으로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우수인재(F2R) 및 지역특화동포(F4R) 유형은 현재 시군을 통해 전환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은 오는 4월부터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13개 시군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특화비자의 세 유형 모두 장기 체류는 물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 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고, 초청 배우자의 취업 활동까지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시, 장애여성 취업 지원사업 내달부터 참여기업 등 모집

광주시는 지역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여성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앞서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 기관으로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선정했다.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장애여성에게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관계기관·전문가 네트워킹 구성, 사회적기업·일반기업 등 참여기업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장애여성을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마케팅, 컴퓨터 기초과정 등 취업준비교육, 직장 적응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부터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취업 후에도 매월 1회 이상 기업체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근무환경 관리, 기업과 근로자 간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등 장애여성에게 신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장애여성 근로자 15명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여성과 기업은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방문 또는 전자우편(5110001@hammil.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062-511-0001)로 문의하면 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3개 시·도 기초실장, 호남권 메카시티 실무협의회 공동선언 추진체계 구성...수도권 일극체제 대응도

광주와 전남도, 전북도 등 호남권 3개 지자체가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메카시티 경제동맹' 방안을 모색했다.

광주시는 지난 14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전남도,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호남 경제를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호남권 메카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를 개회했다.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7월4일 광주·전남·전북이 합의한 '호남권 메카시티 경제동맹 공동 선언'과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이다.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9월 20일 이후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장영평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실무담당팀(TF) 분과별(산업·경제, 건설·SOC, 문화·관광, 교류·협력) 각

시·도 담당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다 시·도의 행정통합 동향을 공유하고 호남권 메카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 사항을 이행할 추진체계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또 추진체계가 공동선언 사항을 효율적으로 전담 이행할 수 있도록 주요 과업 및 예산 부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9월 발간된 분과별 과제 추진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과 신규 과제로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신규 과제는 전북도가 제안한 서해안 철도(세만금-목포), 동학정신 선양을 위한 문화공연 교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광주가 제안한 '광주 방문의 해' 등에 대해 논의,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3개 시·도는 호남권 메카시티 조성을 위한 공동과제 신규 발굴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전남도,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호남 경제를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호남권 메카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를 개회했다.

과 공동선언 사항 이행을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면밀한 분석, 분과별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예산 수반이 필요한 과제는 지자체별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호남권 메카시티 경제동맹의 역

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3개 시·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영평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소멸 위기는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만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면서 "호남권이 상생발전의 동반자로서 지위를 공고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기능하도록 다양한 연계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전남·광주가 힘을 모아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협력해 나간다면 호남권의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호남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 4개월 연속 직무수행평가 1위

리얼미터 2월 광역단체장 평가...탄핵 대응·대선 출마 등

김영록 전남도지사(사진)가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4개월 연속 1위에 올랐다.

1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2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김영록 지사는 직무수행 긍정평가 64.9%를 기록, 전월 대비 3.5%p 상승하며 17개 광역단체장 중 1위에 올랐다. 2위와 9.3%p 차이를 보이며 유일하게 60%를 넘는 긍정평가를 받았다. 지난 11월 평가부터 4개월 연속 1위에 올랐다.

김지사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탄핵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2의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호남 인물론을 주장하며 조기대선이 이뤄질 경우 출마 뜻을 밝히면서 지지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위에는 55.6%를 달성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3위는 52.2%를 기록한 김태홍 충남도지사가 각각 차지했다.

2월 시·도별 생활 만족도에서는 경기도가 68.1%로 전월(64.9%) 대비 3.2%p 상승하며 1위를 기록했다. 서울시(68.0%)와 세종시(66.5%)가 2·3

위를 기록했고, 전남도는 62.0%로 8위에 올랐다.

한편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OD) 자동응답 방식으로, 1월 31일부터 2월 2일, 2월 26일부터 3월 1일 전국 18세 이상 1만3600명(시·도별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통계청은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거주지 부여 방식으로 했으며, 응답률은 3.3%다. 박정철 기자 hohul@



이성오 기자 solee235@

"광주-대구 연대...전국정당 실현 앞장설 것"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 협력의원단 협약

조인철 국회의원(민주당·광주 서구갑·사진)이 지난 14일 대구를 방문해 민주당 대구 서구 지역위원회(위원장 최규식)와 '협력의원 상생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당세 취약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출범한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조 의원은 이날 대구 서구 지역위원회와의 적극적 교류 협력을 약속하고 300만원의 재정 지원금도 전달하는 등 양측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데 힘을 보탰다.

협약식에는 경기 화성병 지역위원회(국회의원 권철승)와 대구 중·남구 지역위원회(위원장 허소)의 협약식도 공동으

로 개최돼 광주-대구 경기를 잇는 '전국정당 실현'의 의미를 더했다. 조 의원은 "협력의원단 제의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곳이 대구 서구였다.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 아래 달빛 철도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5·18 민주화운동과 2·28 민주운동 등 많은 역사적 배경을 가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와 대구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민주당이 전국정당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규식 위원장은 "대구 서구의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고 전했다. 허소 위원장은 "이곳 대구까지 화성과 광주에서 한 걸음에 와주신 두 의원님과 화성병 시·도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대구 시당도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철승 의원은 "전체 광역의원 중 민주당 의원이 한 명 밖에 없는 현실에서 국민의힘과 균형을 이뤄 대구 발전을 일궈나갈 때가 반드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문금주 발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통과

신재생에너지사업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지방공기업 일부 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적용 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문금주 의원은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법 시행

령 개정이 가능해졌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제발행 한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문금주 의원은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라도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자사고 진학 희망생 사교육비 더 많아"

김문수 "경쟁·불안비용...尹 정부가 요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사진)은 16일 "우리의 사교육비는 경쟁비용이자 불안비용"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자사고 외고를 존치시켜 경쟁 요소를 키웠고, 불

은 것은 여러 요인 있었지만 의대 출림과 관련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자사고, 외고, 과학교 등이 일반고보다 지출 많은 것은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경쟁 비용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

경쟁 비용이라는 점은 성적별 현황에서도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성적 구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성적 좋을수록 사교육비가 많다. 일반교과도 그런 양태다. 상위 10% 이내가 61만 9700원으로 가장 많다.

반면 예체능·취미·교양 사교육은 성적 좋을수록 사교육비가 적다. 상위 10% 이내가 3만6100원으로 가장 적다. 예체능·취미·교양 사교육비는 '보충 비용'이고, 일반교과 등 사교육비는 '경쟁 비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또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불한다. 사교육 참여율도 같은 양태다.

수시 원서접수를 앞둔 8월 중순의 대입 상담 중점기간에 이렇게 상담했다는 것이 다. 갑자기 큰 폭으로 바뀔 때 딱딱한 상황이 되고 입시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는 점을 보여준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김문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능을 수개월 앞두고 모집인원을 크게 변동시키거나 갑자기 발언을 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사교육 유발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국가통계포털에 수록된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자사고로 진학하려는 학생은 월 70만600원을 지출해 일반고 희망 학생보다 1.67배 많았다. 외고와 과학교 희망은 각각 66만700원과 64만 4700원으로, 역시 일반고보다 더 됐다.

자사고 진학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서 가장 많은 지불요인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엇갈린다. 초등학생은 외고 국제고이고, 중학생은 과학교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자사고가 가장 높았다. 93.05%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았다. 학원이 사실상 필수코스인 셈이다.

자사고가 외고나 과학교보다 학원비 많

도, 지역사회 연대로 고독사 예방한다

3만여 인적 안전망 활용...위험군 발굴·예방 활동

전남도는 1인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 약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연대로 고독사 예방에 은 힘을 쏟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남 고독사 사망자는 120명으로, 전국 사망자의 3.661) 3.2%를 차지한다. 연령대별로는 50~60대가 54.1% (65명)로 가장 많고, 70대 이상이 18.3% (22명), 30~40대가 15% (18명), 30대 미만은 12.5% (15명) 순이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정기적인 안부 확인 △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지원 등이다.

전남도는 더욱 강화된 고독사 위험군 발굴·관리를 위해 도내 297개 모든 읍면동에 구축된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3만 1187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동대, 통·이장 등이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선다.

특히 올해는 정보통신기술(ICT) 적용을 확대해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실시간으로 물 사용량을 체크하는 디지털 수도미터와 전기사용량을 알려주는 사물인터넷(IoT) 돌봄 플러그 등을 지원해 고독사 위험 신호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